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49호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13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144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3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9-113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주원건설(주)	2019. 6. 10.	인천 170013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 478번안길 3, 5층 (가정동, 주원프라자)	기술인력 미충원	

2019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144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 사 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 표 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320193호	(주)바로에스앤티 이 정 협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구월테크노밸리 C동 309호 (구월동)	2019.6.10.	자진 폐업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상인들의 개·보수비용 부담으로 한 사용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 현 조례는 장기간 점유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전차로 인한 부당 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 점유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 박탈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
- 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하여 중앙정부(권익위, 행안부)로부터 개정 권고,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라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
-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보수 및 비용부담,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정리(안 제2조)

- 나.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야 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음(안 제3조)
- 다.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됨(안 제6조)
- 마.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과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설심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2) 전 화 : 032) 440-3732, Fax : 032) 440-8671
- 3) 전자우편 : sko820@korea.kr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및 발췌사항 1부.
- 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 출입시설 및 지하충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부터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부속시설”이란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실, 기계실, 화장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점포의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낙찰된 금액
2. 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점포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 금액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수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해당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파손·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수탁자는 그 행위를 관리감독 한다.

1. 보행인의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9조(업종제한 등) ①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업종

②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 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도상가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상가에 대한 최종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2. 1호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방법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우선하여 1회(1인 1상가)에 한해 지명경쟁 참여기회를 부여

②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위탁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5년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③ 이 조례 공포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는 경우 본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④ 이 조례 공포일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경우 본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⑤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 및 제4항을 위배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 또는 재 위탁협약은 협약기간의 범위에서 종전의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제22조(사용료) ○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사용료)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input type="checkbox"/>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없음
특이사항	○ 해당없음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

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⑧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충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충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충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충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충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충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③ 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타 시·도 조례 비교

1. 지하도상가 조례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여부	○	○	×	×	×

2. 상위법 위반 내용 반영여부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양도·양수	불허	불허	불허	허용	불허
전대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불허
위탁자우선순위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불허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내규, 대전광역시 도시공사 내규개정으로 불허(2021이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에 불부합 하는 부분을 부합되게 정비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경우 별도의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장 채 기 병